

더민주 지방의원 당적이탈 방지 초비상

국민의당 도당 '당원늘리기'에 우려... "김춘진 도당위원장의 화합·단결 위한 행보 빨라져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당원 늘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보장 이 있는가?”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연일 당원 확보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지역 10석 중 2석 승리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의기소철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당 당적 이동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 배가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면 국민의

당 지역 정치 세(勢)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실 향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역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지지세 확산이 힘든 상황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거의 전멸한 상황인지라 지역위원장만으로는 책임자 역할을 맡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는 지역위원장 경선으로 연결고리가 다른 의원들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기도 해 결속이 필요한 형국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라도 이들과의 전체 간담회를 갖는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의 발걸음이 빨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담을 떠난 전직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복당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이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우

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분열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역의원들에게 소홀해도 지방의원들이 당적을 옮기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탈당했던 전, 지방의원들의 행동을 내부 구성원들은 뼈아프게 반성해야만 한다”며 “복당 추진 등 화합과 결속을 통해 내부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 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부각되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당내 화합과 단결의 기반을 다지면서 민생 행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고위공무원단 55% 'SKY 대' 출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무원단 총 1,476명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이 814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의 절반 이상이 'SKY 대학' 출신인 셈이다.

서울대가 494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78명(12.1%), 고려대 142명(9.6%), 성균관대 73명(4.9%), 한양대 61명(4.1%), 한국방송통신대 57명(3.9%), 한국외대 56명(3.8%), 전남대·경북대·부산대 각 29명(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10개 대학 출신이 1,148명으로 전체의 77.8%에 달했다.

고위공무원단의 출신대학 중 서울소재 대학인 '인서울 대학' 출신이 1,199명으로 81.2%에 달했다. 이는 지방대 출신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지방대 출신 확대에도 임하는 대목이다.

한편,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총 289명 중 서울대 출신이 127명으로 전체의 44%에 달해 서울대 출신이 사실상 외교부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41명, 한국외대 39명, 고려대 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은 정부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소수의 특정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지방대 출신들이 확대받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직사회가 학벌 중심으로 서열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벌이 좋다고 직무능력도 좋은 것은 아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고, 학벌편중현상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순창=이양민 기자

더민주, 원외민주당과 합당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61주년을 맞은 18일 원외민주당과의 합당을 전격 발표했다.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추미애 더민주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창당 61주년을 맞아 양당간 통합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두 당의 통합에 따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인 '더민주'는 '민주당'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당명도 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변인은 “합당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봐야 하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의결기구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조건 없이 일단 같이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 9일 회동에서 통합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고, 전남에도 한 차례 더 회동해 합당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는 지난 9일 당시 “당이 분열되고 분화되는 과정에서 당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해서 당을 떠난 분들을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겠다는 약속을 누차 했다”며 양당 간 통합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에 김 대표도 당시 “추 대표와 나는 지난 기간에 민주세력의 정치적 역사에서 분열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 (추 대표가)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해서 그런 원칙에 굉장히 마음을 같이 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창당 61주년을 맞아 경기도 광주시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를 방문했다. 당 지도부 외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동행했다. /뉴시스



추미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창당 61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민주당은 민주당 창당 61주년을 맞아 양당간 통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호영 “국내선 항공기 지연률 1년 만에 87% 급증”

국감자료... 2015년 10.4%에서 2016년 1월~7월 (인천공항은 1월~8월) 19.5%로 늘어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 안무장수)은 국내선 항공기 지연률이 1년 만에 8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선 항공기의 지연률은 10.4%였으나, 2016년(1월~7월, 인천공항은 1월~8월)에는 19.5%로 두 배 가량 항공기 지연이 늘어났다.

항공기 지연은 항공기 예정 출발 시각

대비 국내선은 30분 이상 초과 이착륙한 경우를 말한다.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전편 항공기의 지연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끼쳐 지연되는 항공기 접속이 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항공기 지연의 1.46%에 불과했다.

공항별로는 제주공항이 24.7%로 지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산공항

23.4%, 광주공항 18.5% 순이었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인천공항은 8개월간) 8,920건으로 항공기 지연이 가장 많았고, 항공사 지연률은 에어서울 33.1%, 진에어 29.8%, 이스타항공 22.51% 순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작년 10대 중 1대 꼴로 발생했던 비행기 지연이 올해는 두 배 가량 늘어났다”며 “국민편의를 위하여 이번 국감감사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오늘 '이해찬 복당' 논의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논의가 오는 19일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창당 6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분 한 분 모셔 오겠다고 했으니, 내일 (이 의원 복당)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사전에 최고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상태”라며 “내일은 정식으로 이 문제를 발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방미 순방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이 지나면 복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복당 논의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후 당무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아직 더민주측은 새 당무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지만, 일단 이 의원의 복당 문제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만 거치게 되면 이후 수순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앞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 당시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됐다. 그는 이후 탈당해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4월 19일 복당을 신청했다.

당 지도부가 이 의원 복당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대두된 충청대명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세종시당은 별도의 시당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인 상태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다시 세종시당위원장을 맡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의 반풍(潘風·반기문 비판)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김관영 “한국 민생절망... 정부 개선의지 의문”

“복핵문제엔 감성적 대응만... 어떻게 정부 믿겠나”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8일 추석연휴 민심에 대해 “대한민국이 민생절망 상황에 빠졌다”고 혹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불경기 속에 추석을 맞이한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일자, 소상공인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절망감을 토로하는 상황”이라며 “청년일자리 감소 문제도 정부에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한 대가도 풍년, 대풍이 올해 예상되는데 오히려 쌀값은 30년 전 수준”이라며 “올해의 풍년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렇게 민생경제가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상황을 정부는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지 의심”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보다 실효성 높은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보문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겠다”며 “복핵위기, 북한 5차 핵실험 문제, 또 SLBM(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발사 등”이라고 안보우려를 추석연휴 민심의 또다른 화두로 지목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종 방송에서 많이 나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김정은 정심상태 통제 불능, 모든 수단으로 압박할 것이다 등 분노 섞인 감정적 발언만 쏟아내다”며 “또 지휘부까지 겨냥해 응징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나오던 단골 메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들은 이렇게 해선 복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한다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복핵 도발을 막을 것인지,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부를 믿어오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진, 남부지방 폭우, 잇단 재난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재난대비에 소홀하다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6.5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되면 한 반도에 대단한 원자력 재앙이 오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참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지진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언급, “대통령께서는 지진에 대해 단 세 단락, 310자 언급을 했을 뿐”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가려운 곳이 어디이고 가장 불안해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정치권, '국감 모드' 돌입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은 일주일여 남은 2016년 정기 국감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0대 국회 첫 국감인데다 김영란법 시행 시기와 겹치면서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간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격돌할 최대 쟁점 심의위 중 하나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를 다룰 운영위다. 여야는 지난 7일 기관 증인으로 우 수석을 '자중' 채택했지만, 관행이나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증인 출석 문제가 둘러싸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방위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급진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북핵 관련 군 당국의 강력한 대처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사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전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에서도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송곳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정정위는 경주 강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처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뒤 300차례 이상 여진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도 강진 관련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이 원전을 방문하는 등 원전에 대한 야권의 대대적인 공격이 예고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 역시 지진 관련 정부의 대응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상청의 지진 측정 장비,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가 격돌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거듭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에서는 야당이 세월호 참사 때 이 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KBS 보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학교 밖 청소년 폭력 검거 점차 증가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교 밖에서는 오히려 청소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5156명이 학교 밖에서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로 불참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으로 불참한 청소년 수는 1만2495명이다.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2년 2만3877명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 1만2495명까지 줄었다. 반면 학교 울타리 밖에서 학교폭력을 저질러 불참한 청소년 수는 ▲2012년 2055명 ▲2013년 4422명 ▲2014년 4199명 ▲2015년 5156명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학교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까지 소년범 비중도 지난 2012년 35%에서 지난해 44%로 증가했다. /뉴시스